



어촌관광 활성화 지속 추진을

국회를 통과한 어촌·어항법이 지난 5월31일 공포되어 오는 12월 1일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협회 이름도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바뀌게 되며 업무 영역도 다양하면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촌 어항을 지금보다 잘 살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과 같이 낙후된 어촌 어항산업을 획기적으로 살릴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촌 어항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통계를 한번 살펴보자. 1950년대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약 30만톤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에는 무려 3백50만톤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에는 2백48만톤으로 무려 1백만여톤이 줄어들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때문일 수도 있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값싼 수입수산물의 범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문제점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어업소득에 기인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결국 어떤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어업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업외소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휴가철이며, 전체 인구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계절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100사 100촌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기획해 어촌을 중심으로 주요회사와 어촌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협회에서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어촌 100선 찾아가는 길' 관광안내지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어촌어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반 도시민이 이곳을 찾았을 때 쾌적한 환경과 이에 걸맞는 기술적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일회성 관광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어촌어항을 휴양지화, 또는 관광지화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의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광 레저시설을 포함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관광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툭툭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즐기고 돌아갔을 때 소비한 금전과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게 바로 협회가 바라고 어업인이 바라는 실질적인 어촌 관광지화 사업이 될 것이다.

요즘 한창 유행어가 되고 있는 Blue Ocean 개념이 아마도 그것일 것이다.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경쟁자 없는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 말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야 말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자 없는 독보적인 어업의 소득의 현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각각 특색 있는 우리의 어촌어항을 만들 가능성은 이래서 매우 높다.

아무리 수산자원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해도 한 순간에 과거와 같은 어획량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저히 떨어질 어업소득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어촌관광지화라면 수산인 모두가 나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바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명제이다. (어촌어항소식)

